

“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코로나19대응 연구추진단)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분야별 전략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CONTENTS

1. IMF, 금융위기, 포스트 코로나
2. 분야별 대응방안
 - 산업정책
 - 일자리
 - 중소기업·소상공인
 - 농업
 - 해양수산
 - 관광
 - 국제교류
3. Bounce-back 충남을 위하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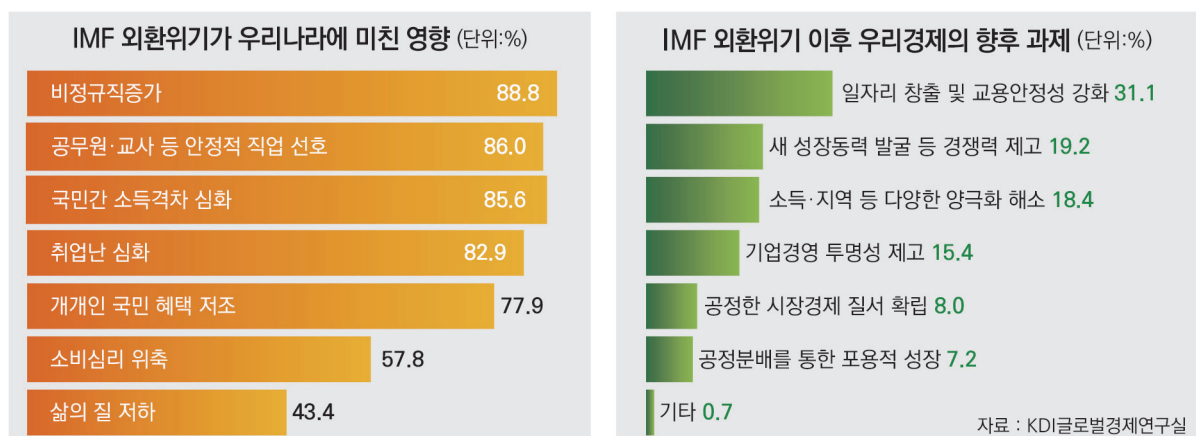
- ◀ 포스트 코로나는 보건과 경제 부문의 쌍둥이 위기
- ◀ 예상되는 충격은 ①도산위기 기업 급증 ②재정수요 폭증 ③글로벌 수요 감소 지속 ④가계대출 급증 ⑤ 일시휴직자 폭증, 취업자 감소
- ◀ 중앙/지방정부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기업을 위협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강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
- ◀ 분야별 주요전략은 다음과 같음
 - 산업정책: 주력산업 고도화, 하청기업 자생력 강화, 팬데믹 기회로 관련 산업 육성 추진, 신규산업 육성으로 산업생태계 다양성 추진(디지털 경제, untact 산업, 의료의약산업, 온라인 콘텐츠 유통 등)
 - 농업: 지역먹거리 선순환시스템 정비 및 본격시스템 가동(공공기관 등으로 식자재 확대공급)
 - 해양수산: 안전한 수산물, 로컬푸드 확산, 가공산업 전환계기로 활용
 - 관광: untact·거리두기·면역의료 등 키워드를 입힌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
 - 국제교류: 코로나19 의제 중심의 대외교류 추진, 제포비아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 충남경제의 악한 고리와 아픈 손가락, 도전을 막는 규제, 소극행정 등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바꿔갈지에 따라 “Bounce-back 충남”의 속도와 수준은 달라질 것임
- ◀ 이러한 정책추진의 기반은 “설득과 포용”

01

IMF, 금융위기, 포스트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는 보건과 경제 부문의 쌍둥이 위기(Dual Crisis)
-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위기경험 트라우마 재발
 - KDI “IMF 외환위기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2017)”의 설문 결과,
 - * 국민의 57.4% “50년동안 가장 어려웠던 때는 IMF 외환위기”
 - * 60%의 응답자가 “IMF 외환위기가 본인 삶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영업자와 대학생(68.9%)이 삶에서 큰 피해 입었다고 응답
 - * “IMF 외환위기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금모으기 운동(42.4%) → 대량실업(25.4%) → 기업파산(17.6%)
 - * “향후 정부의 대응과제는?”: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성 강화(31.1%)가 최우선 응답

[도표 1] IMF 외환위기 인식조사(2017)



출처) 헤럴드경제(2017.11.14.)

- 예상되는 5중 경제충격¹⁾

- ① 도산위기 기업 폭증 (코로나 이전부터의 불황으로 경영난 가중)
- ② 재정수요 폭증
- ③ 글로벌 수요 감소 지속
- ④ 가계대출 급증 (전년 동기대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 ⑤ 일시휴직자 폭증, 취업자 감소

- 경기회복 예상 시나리오

- V·U자 반등 : 소비회복, 기업의 강한 복원력 → BEST
 - * 3분기 이후 경기반등 여부가 V자 반등의 성패를 가를 것임
 - *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심리를 깨우고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어야 함
- W자 반등 : 정부재정 지원으로 인한 일시적 소폭반등, 민간경제 선순환 연결 실패, 재불황 상황 우려
 - * 코로나 재감염으로 인한 2번째 경제충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임
 - * 재정소진, 글로벌 공급망의 더딘 회복
- L자 반등 : 경제심리 극도 위축, 정부재정 파산, 민간 회복의지 상실 → WORST

- 중앙/지방정부는 “일자리와 기업을 위협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강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

- 독일의 즉시지원금(Soforthilfe) 사례 : 先지급, 後확인
 - *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혀 세금납부의 대상임
- 미국의 전국민 1,000달러 지급, 지역사회 자동부양법 (ABC법, 하원 제출중) : 디지털 공공화폐 지급 시스템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디지털화, 전달비용 제로화, 지급속도 제고 목적

- 대책방향은 “先생존 後조정”“뉴노멀 대처”

-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지원

1) 매일경제 “바운스백 코리아” 연재기사 참조

-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함
- 실직자는 실업급여로 보호해야 함
-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영세업자 종사자는 재정투입을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
- 코로나 19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언택트 소비 등의 뉴노멀에 대응하도록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 특히 언택트 소비는 Industry 4.0에 부합하는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머지않은 미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함
- * 5G와 초연결망 시대에 기술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성이 강화되면 언택트 소비시장이 점점 성장할 것으로 전망 가능함(비대면 거래에 대한 제도적 정비, ICT 기술의 향상을 전제로 함)
- * 단순한 온라인 거래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언택트 소비에 부합하는 상품(HMR 및 레토르트 식품, 교육 콘텐츠 등) 및 포장기술 개발, 물류 및 배송체계 구축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도표 2] “Bounce-back 충남” 로드맵

기간	단기대응	중기대응	장기대응
전략	피해액 보전 대책	소비 활력도 제고	위기 면역력 증진
추진 사업	생활안정자금 (기본소득) 신용보증	지역화폐 확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완화 직거래장터 확대 지역기업 소비운동 실업자 구제 비대면 산업육성계획 수립	소상공인 체질개선 정책 (판매채널 다변화) 중소기업 건실화 정책 (판로개척, 부가가치 확대 등) 대기업 하청 다변화 (탈중국,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의약바이오 산업정책 추진
연구 과제	피해액 예측	피해액 추산 '면역, 방역, 비대면'+산업정책	지역산업 발전방안 마련 의약 바이오 산업정책 무인화/자동화 산업정책

02 분야별 대응방향

1. 산업정책

1) 당면문제

(1) 기존산업의 재편압박 가중

가. 주력산업의 위기와 기회

[도표 3] 기간별 충남 제조업 성장률

산업별	2008~2012 연평균증가율	2013~2017 연평균증가율
제조업(10~34)	12.59%	2.14%
식료품 제조업	5.52%	3.26%
음료 제조업	-5.88%	10.7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3%	2.4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01%	-14.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84%	17.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5%	3.5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7%	9.8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8%	12.4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5.13%	2.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72%	6.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63%	3.6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32%	-3.23%
1차 금속 제조업	-1.70%	4.5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99%	6.28%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5%	-1.5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33%	30.55%
전기장비 제조업	13.15%	-4.6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2%	17.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6%	-1.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35%	0.78%
가구 제조업	-12.85%	0.04%
기타 제품 제조업	8.84%	6.8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07~2017년

■ 충남의 주력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전에도 충남의 주력산업의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지식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제조기반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
- 특히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에서 성장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10.16%(2008~2012) → -1.50%(2013~201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연평균 성장률 21.55%(2008~2012) → -1.59%(2013~20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연평균 성장률 15.13%(2008~2012) → 2.30%(2013~2017)

■ 충남의 주력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소비위축으로 위기에 직면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3.5% 감소해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6.0%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4.8% 감소함
- 한국은행이 내놓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내린 54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자동차
 - 코로나19 여파로 완성차생산차질과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신품사들의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석유화학
 - 이미 경기저점이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수요감소로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제품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유가에 따른 원가 경쟁력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이 희석됨
- 철강
 - 금속(철강)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전방산업(자동차, 조선)의 업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전세계 철강산업의 수급악화가 예상됨

■ 슬기로운 산업재편을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률을 제고해야 함

- 주력산업의 재편과정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함
 - 내연기관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 메모리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 디스플레이 ⇨ 초고화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나. 중소기업의 한계와 도전

■ 코로나19로 인한 원청기업의 위축은 하청기업에게 더 큰 위기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뚜렷해서 원청기업의 위기는 하청기업의 위기로 직결됨
 - 유럽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어 있고,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변화를 강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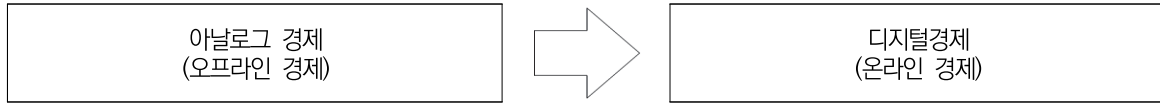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수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충남의 현대 자동차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수많은 하청기업도 동반 중단이 발생함
 - 위기상황에서는 원청기업도 하청기업을 책임질 수 없으며, 이에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해 내실화 지원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도모
 - 중소기업의 브랜드화 지원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달성(OEM 방식에서 ODM 방식으로 전환 유도)
 - 자체 브랜드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해 글로벌 부품기업으로 육성

(2) 신산업이 태동하고 디지털경제로 전환가속

■ 코로나 이후 생산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소비의 온라인화가 보다 확대될 것



■ 언택트(untact) 산업의 성장

- 비대면/온라인으로 소비와 여가를 영위하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
 - 네이버,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언택트 기업들의 성장세 가속

■ 의료/의약 산업의 성장

- 코로나 19사태의 교훈으로 공공복지의료 체계의 중요성 부각
 - 케미컬약품, 의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예상

■ 전자정보산업의 성장

- 비대면 환경 지속으로 홈코노미²⁾의 활성화
 - 개인 노트북/테블릿 등의 수요확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예상

■ 온라인 콘텐츠, 유통시장의 성장

- 콘텐츠에 대한 욕구,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유통시장의 변화가 예상됨
 - 다나와,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성장이 예상
 - 원격의료 및 온라인교육 활성화

■ 대면 산업도 코로나사태이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 테마파크, 여행업, 예술 및 공연, 컨벤션산업의 단기적 위축이 예상되나 코로나 종결 후 폭발적 수요 예상

2) 집을 뜻하는 홈(home)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여가/소비 등 전반적인 문화생활과 경제활동을 집에서 해결하는 라이프스타일 의미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1) 정책방향

①	②	③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팬데믹 성장산업 육성

(2) 추진시책

■ 코로나 이후를 위해 충남은 크게 3가지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첫째,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원
 - 내연기관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 반도체패키징 ⇨ 시스템반도체
 - 디스플레이 ⇨ 초고화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 하청공장에 대한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주요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 대기업이 미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둘째, 위기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하청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하청기업의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강화하여 글로벌 부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하청기업의 판로 다각화, 브랜드화 지원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확보(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등)
 - 원·하청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동반성장의 계기 마련
- 셋째, 팬데믹 사회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신규산업 정책 추진
 - 팬데믹에서 필수불가결한 건강식품, 생활환경(청소/위생도구), 의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 팬데믹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게임,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과 온라인 유통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위기상황 충격을 최소화
 -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등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빅데이터산업의 육성도 필요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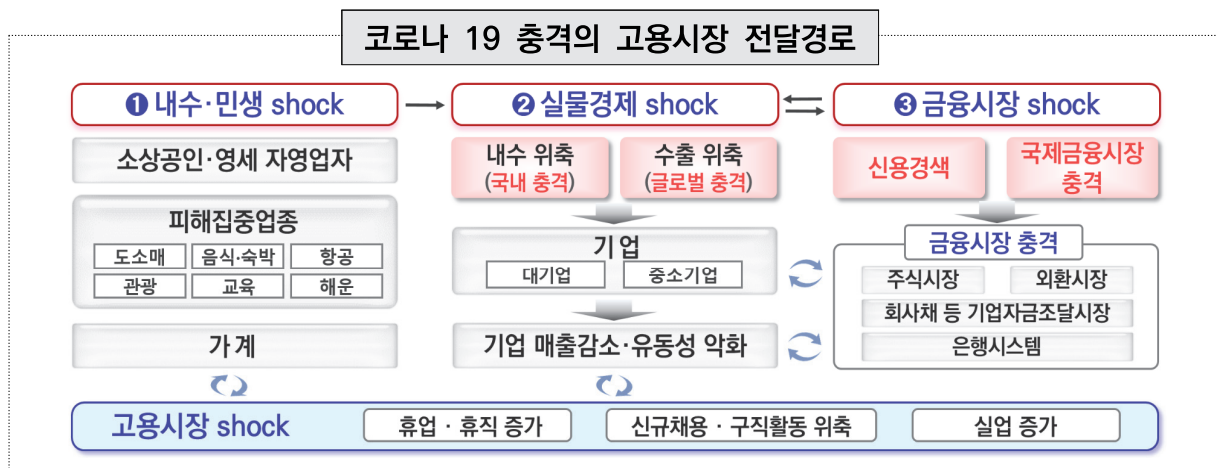
- 저성장기 슬기로운 산업구조 전환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의 경제구조 확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원·하청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동반성장의 계기 마련
- 팬데믹 사회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신규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충남 산업생태계의 다양성 추구

2. 일자리

1) 당면문제

- 현재, 코로나 19에 따른 공포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침체가 고용충격으로 전환되며, 일자리 위기상황이 진행 중임
 - 여기에 post-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구체적으로 ①보호 무역 강화 및 미·중 무역갈등 심화, ②디지털 플랫폼 경제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변화, ③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언택트(untact)산업과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로 인해, 고용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나, 향후 글로벌 차원의 경제환경변화가 국가와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표 4] 코로나19 충격의 고용시장 전달경로



자료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관계부처합동, 2020.4.22

- 현재까지는 충남의 고용률,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충격이 고용시장에 전달되는 과정 중으로 전면적인 고용위기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임
 - 실제로 고용률의 경우, 코로나 19위기가 가시화되는 금년 1월 59.1%, 2월 59.4%, 3월 60.9%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업률은 금년 1월 3.5%, 2월 4.2%, 3월 3.9%로 횡보양상을 보임
 - 다만, 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 자료(2020.3)를 보면, 충청권 제조업 중 석유화학 및 음료부문에서 생산이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교육 및 여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은 일자리 유지·창출·상실과 코로나 대응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구분됨

[도표 5]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노동부)

구분	정책방향	특별대책
일자리 유지	재직자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확대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확대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일자리 상실	생계 및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규모확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근로자 생계비 융자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코로나 대응	감염 확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충남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대책과 연계하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post-코로나 시대에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

- 단기적 대응방안

- ① 충남 일자리 진흥원 내 코로나 고용위기 대응 T/F 구성·운영
- ②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 대상 도내 공공부문(비대면·디지털일자리 등)일자리로 유도
- ③ 일·가정 양립세대 대상 충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아동수당과 연계)
- ④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형 청년 일자리수당 신설

- 중장기적 대응방안

- ① 언택트(untact) 산업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추진
- ② 충남형 디지털 뉴딜(digital new-deal) 추진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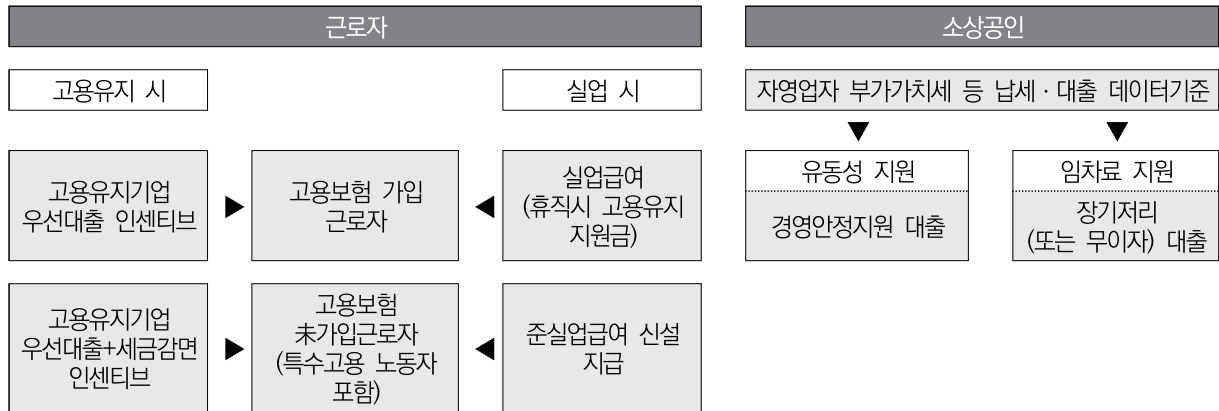
1) 당면문제

- 중소기업 54.5%, 소상공인 81.2%가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를 응답
 -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89.1%), 손님감소(87.9%) 피해 호소
 - * 필요시책 : 피해업소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68.5%) → 전업종 신용등급무관 특례보증(53.6%) → 특별저리자금 융자(51.8%)
 -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포스트 코로나 모습은 경기침체 지속 →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차질 → 소비위축 및 고객감소
 - * 필요시책 : 세제지원(27.3%) → 피해업체업종 특별금융지원(23.5%) → 부품소재 수급문제 해소(18.5%)
- “망한 뒤 돈 빌려줄건가”
 - 위기때마다 반복되는 분류 및 전달체계 문제
 - * “긴급대출에 소상공인 긴 줄..수령까지도 한달.”(SBS 2020.3.5.)
 - * “충남 소상공인들, 대출 기다릴라 도산할라” (대전일보 2020.4.8.)
 - 부산신보 : 공적보증, 패스트트랙 설치, 심사위원 총원
 - 서울신보 : 평균보증처리기간 2주(10영업일) 이내 단축 지시,
시니어인력 추가채용으로 피해기업 보증심사 집중처리 등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충남도는 “일자리와 기업을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도정 의지를 보여주는 즉시적, 신속한 정책수립 및 실행
 - 기업·근로자(고용유지, 실업 지원), 소상공인(현금유동성, 고정비 지원)
 - * 고정비 중 가장 큰 부분인 임차료, 종사자 임금 지원 방법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
 - * 착한 임대인, 착한 고용주 등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로 이를 보완 필요
 - 예) 독일(6월까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금지), 미국(34개주에서 임대인 퇴거 금지 법제화), 프랑스(임대료, 전기·가스·수도료 유예)

[도표 6]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모식도



출처) 매경경제(2020.4.20.)

- 도내 주력산업 주도의 자체펀드 조성 (가칭 “충남 ○○산업 연대펀드”)

* 일본 자동차 4대단체 펀드조성 사례 (“互助会ファンド”)

* “동료기업”을 돕는 것이 기능과 인재유출을 막아 산업을 유지계승하는 것이라는 당위성 호소

• 도민의 소비촉진 유도

[도표 7] 지역화폐 개선방향

현행	개선방향
지역화폐 전용 앱 설치해야 함(예. 공주시 “착한페이”)	지역민이 사용중인 앱에 지역화폐 기능 추가(인앱 형태)
계좌이체 구입만 가능	신용카드 구입, 기존 포인트 전환 등 확대
QR결제만 가능(POS사용 가맹점 별도 가입)	QR, 바코드, NFC(지근거리 무선통신)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
배달서비스 이용시 QR코드 사용 불가	앱 상에서 주문, 결제, 배달/픽업 가능(공공 배달앱 기능)
가맹점 별도 모집	제로페이 등 타결제 가맹점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호환
지역화폐 보유액보다 결제액이 크면 나눠서 결제	한번 결제로 지역화폐 초과금액은 신용/체크 등으로 자동결제 (신용카드 연계한 자투리결제)
가맹점들의 자체 마케팅 이벤트 연계 불가	가맹점이 자기업체의 모바일 할인쿠폰 발행, 특가상품/ 이벤트 푸쉬 메시지 발송
지자체 이벤트 연계 불가	“농사랑” 등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홍보, 지자체 축제 안내 등
지자체 바우처 연계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 통해 지급

출처) 이민정(2020) “충남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방안”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선결제 운동 등을 통해 단기적 소비유도 (착한 소비자 운동)

- 할인행사 전개로 소비진작

*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박람회장 등을 활용한 대규모 장터

* “동학소비운동 in 공주” “충남 외식week”

* 예)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장터 확대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 6월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판매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진행

제주 고메위크 사례

- 지역화폐 활성화를 민간기술 활용하여 지역상점, 로컬푸드 마케팅, 주문·배달, 포인트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 뉴노멀, 지역화, 비대면(untact)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을 지원

- ① Home-conomy, Shut-in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시스템에 대응

-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홈코노미의 가속화
- 재택 시간이 길어지면서 밀키트, 화장품, 생필품에 대한 배달 증가
- 선결제, 착한 소비자운동을 일화성 운동이 아닌 구독경제 시스템화를 통해 근본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배달시스템은 대부분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역화폐 시스템에 배달을 연동하는 개선을 통해 지역적 대응

- ② 물리적 거리두기 습관, 방역강화의 매장운영

- 미국 월마트, Trader Joe's, 싱가포르의 매장에서는 매장내 고객간 거리확보 위해 입장고객 수 제한
- 입장수 제한을 위해 예약제, 웨이팅 등록시스템 의 보편화 예측 (키즈카페, 커피숍, 미용실)
- 방역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클린존”인증

- ③ 강제적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 코로나 발발 이후 온라인 매출, 배달음식서비스 급증 등 디지털 전환 없이는 생존위협
- 드라이브 스루 픽업, 밀키트, 배달 형식으로 대면 최소화

3) 기대효과

- 사업자와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및 경제적 심리 위축 조기 극복

- 착한 임대인 + 착한 소비자 + 착한 방역 + 적극 행정

- 착한 임대인, 착한 소비자 운동의 지속적 전개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적극행정이 가미되어 “충남형 골목경제 시스템”으로 정착

4. 농업

1) 당면문제

- 위기)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하여 식량안보(food security) 위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위기 경험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쌀 외에 대부분 품목은 낮은 식량자급률 수준(두류, 맥류, 잡곡류 등)
 - 해외로부터 수출 금지 혹은 가격 상승 시 낮은 식량자급률을 보이는 나라는 식량위기에 노출
 - 해외발 식량파동 발생 시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직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위기
- 위기)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고용인력 부족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안정 구조로 연계
 -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특히 가축사료인 옥수수, 대두 등)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직면 예상,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농가소득 및 경영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작용
 - 현재의 저가 농산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임을 받는 외국인노동력 공급이 있었던 것인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포기, 시기연기 등으로 농촌인력부족 발생, 국내 인력 고용으로 인한 노임비 증가 등 생산비, 경영비 압박 가중화
- 기회) 자기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해결로 대두됨에 따라서 먹거리 중요성 날로 강조
 -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빈번해짐에 예상됨에 따라서 사람들 모두가 평상 시 자기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먹거리 섭취하는 행위
 - 평상 시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기능보조식품 수요 증가, 먹거리 중요성에 대해서 날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 기본전제)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 요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
 - 일회성 감염병이 아니라 주기적, 장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회성 팔아주기, 착한소비 운동'과 같은 일회성 대책, 시혜성 대책이 아닌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 요구하는 시대
 - 물리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이 많아질수록 의식주가 중요하고 그 중 먹거리(食)가 우선, 먹거리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 도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농촌임을 강조하는 발판이 됨.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방향 1)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정비 및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사업의 정례화
 - 15개 시군별 ‘충남산 식재료 꾸러미 제품’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원제품(원물)과 가공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화(DB화), 농사랑 온라인쇼핑몰 정비
 - 15개 시군별 유치원 및 학생 가정에게 학교급식 공급의 충남산 친환경식재료(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관련 가공품 포함) 꾸러미 배달 정례화
 - 도내 취약계층(특히 복지수급 대상에서 빈틈이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충남산 식재료 꾸러미 배달 정례화
 - 도청 및 15개 시군별 청사 급식시설,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충남산 식재료 사용 권장하고 충남산 식재료 사용 시 차액지원사업 실시
 - 도민, 시민, 지역 내 식당 등에게 충남산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충남산 식재료 사용 시 차액지원사업 실시
 - 순환체계 중 폐기단계에서 농산물과 관련한,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용품 줄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재질로 전면 전환
 - 순환체계 중 폐기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관련하여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로 정의로운 전환 시도 (관련 시설 도입이 우선 전제이므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 돌입 필요)
- 방향 2) 균형적인 품목 자급률 달성을 위한 품목의 다양성을 위한 생산-유통-소비체계
 -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쌀에만 편중되어 있는 구조, 15개 시군별로는 특정품목별 단작화된 구조
 - 편중된 구조, 단작화된 구조를 “품목의 다양화, 유통과 소비 방식의 다양화, 가치제고의 다양화” 구조로 전환
 - 다양한 소비와 판매방식 활성화(온라인 직거래 판매, SNS 판매, 로켓배송, 드라이브스루 등)
 -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업농촌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도농교류 플랫폼 확대 등
- 방향 3) 농가 및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정교한 경영안정대책 수립
 -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경로 및 출하실태조사, 농산물 판매 및 수취가격실태조사, 학교 급식에 납품하던 농업인·농가·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의 유통경로 및 출하실태 조사, 농가가 겪고 있는 농업인력수급 실태조사 등 애로사항 파악
 - 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한 수취가격 보장 확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기준 범위 확장을 통한 사업 확대, 긴급위기농가의 경우 충남형 농가재난지원금 실시 등
- 방향 4) 농업은 타 분야³⁾의 피해대책 접근과 달리 도민과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접근관점 및 인식으로의 전환

- 일회성 팔아주기 및 착한소비 운동 전개를 통한 일회성·시혜성 도움이 아닌 것으로 관련 주체 모두가 기존의 접근관점 및 인식으로의 전환 필요
 - 농민과 농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한다는 파수꾼으로서 자존감 회복, 정체성 복원하는 교육과 홍보, 관련 심리 프로그램 마련
- 방향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중요성에 대한 충남도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 주력
 - 자재지원 사업 및 하드웨어 중심의 보조사업 등 시혜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경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예. 농민수당 확대, 농민기본소득 도입, 차액지원사업 등)
 - 환경을 고갈하고 오염시키는 농업생산과 유통에서 탈피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유통으로의 전환, 특히 축산업의 환경부하 문제 해결 적극 주력(예. 친환경농업의 확대, 경종과 축산의 순환농업구조 달성, (가축분뇨해결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확대, 공익형 직불제의 전면 확대,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복원 등)

3) 기대효과

-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틀 설정, 관련 대책 추진 가속화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체계 구축, 농민과 농업의 자존감 회복, 환경친화적인 농업확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개편
- 재배품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균형적인 먹거리자급률 달성에 기여
 - 쌀에 편중되어 있는 생산구조에서 다양한 먹거리(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특용작물류)생산구조로 전환 가능, 자연스럽게 충남은 균형적인 먹거리자급률 달성
- 다양한 먹거리 생산구조는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환경 보전에 기여
 - 단작화에서 다양한 먹거리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등 환경과 생태계 보전
-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 구조로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기반 구축에 기여
 - 생산비, 경영비, 가격, 노동력 수급 등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총동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기반 구축

3) 주 : 타 분야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일용직노동자, 계약직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말함.

5. 해양수산업

1) 당면문제

-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개장이 불투명하고, 해양수산업 관련 다양한 축제 개최가 불투명하여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 해양관광은 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집중되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액티비티한 레저·스포츠 활동이 전개되나 사람들이 밀집하고, 접촉빈도가 높아져 감염 위험성도 충분
 - 또한 해수욕장으로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ex, 머드축제 등)가 개최되고, 연안지역별로 수산물 테마로 하는 축제가 매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전면 취소상태이고, 향후 개최 예정인 축제도 개최 불투명
- 주로 외식중심인 수산물 소비의 급감 및 유통업·서비스업의 침체 우려
 - 수산물은 주로 외식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매우 간단한 조리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식품적 특성 보유
 - 국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외식업 중심인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여 어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수산물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피서·행락철에 접어들면 수산물 소비가 회복 가능성도 있으나, 다시 대규모 전염이 발생할 경우 소비 위축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충남도가 추진하는 해양수산업 관련 대형 역점과제의 원활한 진행 우려
 - 한국판 뉴딜 및 재난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 정책으로 그동안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태안, 서산),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해양치유산업(태안 달산포), 어촌뉴딜 300 사업지(15개)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 우려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대단위 행사 중심보다는 작지만 내실 있는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축제는 개최하되, 대규모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야외 전시회, 콘서트 등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 필요
 - 보트, 서핑, 윈드서핑 등은 주로 아웃도어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람 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 전염 걱정 없이 레저·스포츠 활동 가능

-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로컬푸드 확산의 계기로 활용 가능
 - 전염병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단백질원인 수산물 소비 증가 기대
 -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소비자들은 인증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MSC, ASC, 양식장 HACCP 등 수산물 인증제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 현재 양식어종(광어, 전복 등)의 소비가 정체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활용하여 판매방식 도입 필요(※ 매장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도 판매 가능)
 - 충남도 차원의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산 수산물을 애용 캠페인 개최 필요(※농업과 연계)
 - 수산물 소비감소로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급 가능여부를 중앙정부와 협의 필요
- 충남 수산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전환의 계기로 활용 가능
 - HMR(Home Meal Replacement) 또는 레토르트(Retort) 식품 등 현재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포장 패키지 및 간편식을 개발하여 향후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소비체계 구축
 - 수산물은 농산물보다 더 강한 신선도가 요구되어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소포장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해양수산물 관련 역점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원활한 추진동력 확보
 - 코로나19이후 방역, 건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접목하여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및 설득
 -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백신산업, 해양치유산업은 헬스케어사업 등의 사업 논리 지속적으로 제기 필요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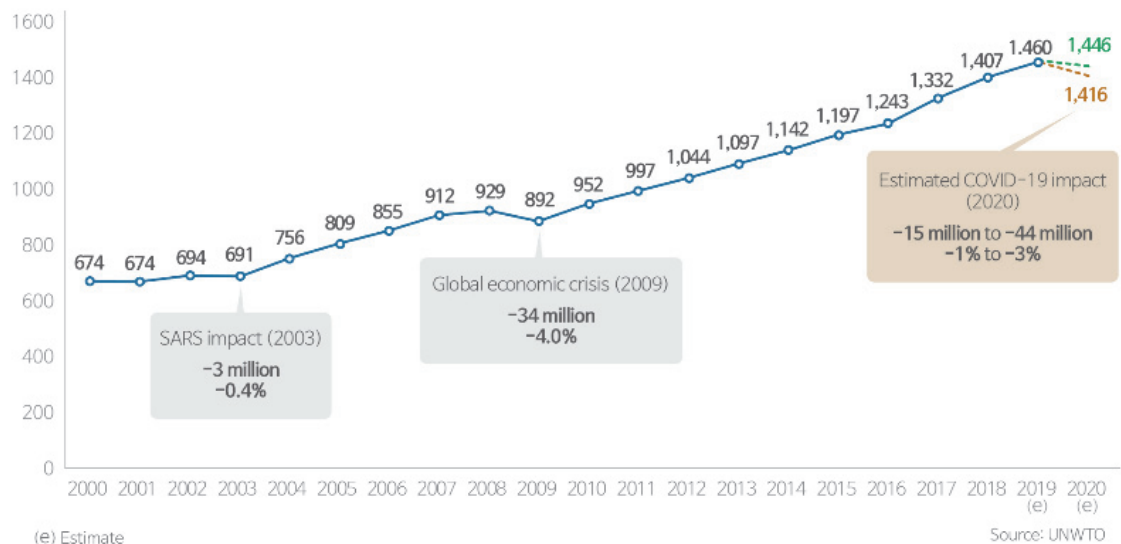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해양관광 위축, 수산물 소비감소 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충남 해양산업의 발전 계기로 전환 필요
- 해양수산 분야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은 대단위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업기간으로, 국가차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6. 관광

1) 당면문제

- 코로나19의 발생은 전산업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옴
 - 최근 UNWTO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관광객은 1~3%감소, 관광수입은 300~500억달러 감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관광객은 9~12%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도표 8] 2020년 세계 국제관광객수 전망 (단위: 백만명)



자료: UNWTO (2020.3.5.),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rism

- 국내 관광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산업의 업종별로, 항공업계, 숙박·여행업, 회의산업, 유원시설업뿐만 아니라 중소관광업체와 연관 사업체까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파악됨
 - 국내 관광산업 전체 수요가 90%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보고 있음. 산업별로는 MICE산업은 3월 첫주까지 최소 7천억원이상의 피해와 유원시설업도 1천5백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 여행업도 3월 첫주는 인바운드 91%, 아웃바운드 88%가 감소하여 6월말까지는 450만명 정도, 연말까지는 천 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없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숙박업도 호텔의 판매율(OCC)이 10%내외로 피해규모가 5천8백억원 정도로 추산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향은 특히 중소관광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충남은 코로나 시작 초기에 전망(충남경제 이슈보고서)에서는 국내관광 40% 급감과 중국관광객의 입국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였음.
 - 중국인 관광객 입국제한이 6개월 지속되면 도내 생산액 5,290억원, 부가가치액 1,72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설 연휴 이후 국내외 관광객 5,000명이 충남여행을 취소한 이후 매우 많은 관광객이 감소하여 도내 90%가 소규모 업체인 숙박·음식점에 큰 타격을 가져다줌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코로나19에 대한 충남의 관광산업별 피해와 영향에 대한 분석과 사업별 대응전략을 위한 사전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시책을 마련해야함
 - 업체별 피해 사전조사 및 업종별 피해규모 파악과 지원대책 마련 : 충남관광협회 및 요식업, 숙박업 협회 등 연계
 - 충남코로나 극복 원-스톱 지원서비스제 실시 : 전산업 분야 공통적으로 실시
 - 충남코로나 대응 지원창구 운영 : 관광산업 등 전분야 공통적으로 실시
- 예산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시책 추진
 - 정부 지원자금의 확보와 피해업체의 우선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개발기금 융자
- 온라인 관광상품과 지역 특산물, 음식 등의 판매와 유통 확대사업 추진
 - 영상 힐링 여행상품의 제작과 배포, 관광홍보 실시 : 방송매체, SNS, 충청남도과 시·군별 관광홍보 방송 등
 - 지역특산물과 음식의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 확대 : 농산물, 수산물, 지역향토음식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비대면 관광자원 및 여행상품의 발굴과 운영
 - 일방통행 걷는길 운영 : 코로나블루 솔바람길(기존 솔바람길 중 순환형 걷는길 대상)

- 드라이브스루 관광코스 운영 : 서해안해안도로(홍성-보령-서천), 금강변도로, 원산안면대교 등

- **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충남 관광수용태세 사전 구축**

- 청정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추진 : 포스트코로나 관광붐 조성 플랜카드 및 청결청소운동 등
- 관광서비스 교육 및 실천운동 전개 : 관광업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 숙박 및 관광업소별 무료마스크 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운영 : 기존 마스크 확보

3)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전 피해분석과 대응시책 전개로 빠른 회복과 지역 관광산업의 안정화 기틀 마련
- 관광산업에 대한 업체별 대응시책의 전개로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관광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국제교류

1) 당면문제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충남의 대외교류사업들이 잠정 중단되고 향후 추진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
 - 한황해포럼 등 도내 국제포럼의 추진, 공공 및 민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등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향후의 추진 시기, 내용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 대외교류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 문제해결과 관련된 국제공조가 비교적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일례로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12개 지방정부가 마스크 29만 1,800장, 방역봉 980벌을 충남에 지원
-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확산과 이로 인한 도내 국제화 수준 저하 가능성 증대
 -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나타날 우려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국제화 수준이 기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2) 전략방향 및 추진시책

- 충남도 주요 교류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교류가 재개될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대외교류 추진
 - 향후 한황해포럼, 지방정부3농 포럼, 탈석탄국제컨퍼런스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포럼의 주요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유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제고된 점을 활용하여, 수출박람회 등 경제교류 사업, 방역정책 공유 등 정책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 유관분야(보건의료,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 추진
- 제노포비아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실시
 -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충남은 대외 의존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이방인 혐오) 문제는 잠재적으로 충남의 경제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도내 유학생, 이민자 등에 대한 제노포비아 문제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의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3) 기대효과

-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구체성 있는 공조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도민의 국제화 인식수준 제고와 제노포비아 발생 예방에 기여

03

“Bounce-back 충남”을 위하여

- 충남경제의 “약한 고리” “아픈 손가락”, 도전을 막는 규제, 소극행정 등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바꿔갈지에 따라 “Bounce-back 충남”의 속도와 수준은 달라질 것임.
 - 소상공인은 경제정책 대상이면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식되어 경제의 “아픈 손가락”.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종속적 원하청 관계로 묶여있어 충남경제의 “약한 고리”
 -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자금, 제도적 지원
 -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지역화폐 플랫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 사용과 지역상권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강구
 - 중소기업은
 -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등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신기술, 창업, 실증 등 다양한 도전과 실패를 포용하면서 성장기회를 극대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집행 골든타임 확보
 - * 인허가 기간 단축, 산업활력제도 개선, 법정 의무교육기한 연장 등
 - * 공공기관도 지역상권 도움을 위해 선결제 제도 활용하여 착한소비자 운동 동참
- 이러한 정책추진의 기반은 “설득과 포용”
 - 이익단체, 주민, 노조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 낙오자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포용한다는 설득과 정책 수립
- 분야별 단기시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도표 9] “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전략

분야	당면과제	전략	기대효과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전부터 주력산업 성장률 둔화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압박과 단기적 소비위축으로 위기 직면 · 원청업체 위축은 하청업체에 더 크게 체감 · 중소기업의 변화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 Untact 산업, 의료의약 산업(공공복지의료), 온라인 콘텐츠 유통 등 성장 · 주력산업 고도화 하청기업 자생력 강화 팬데믹을 기회로 관련산업 육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기로운 산업구조 전환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원하청 동반성장 · 신규산업 육성으로 충남의 산업생태계 다양성 제고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침체가 고용충격으로 전환, 일자리 위기상황 촉발 · 아직 충남은 전면적인 고용위기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중앙대책 연계하면서 보완 · 중장기적으로는 untact 산업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추진, 충남형 디지털 뉴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산업전반의 스마트, 디지털 체제로 전환 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경기 악화 (중소기업 55%, 소상공인 81% 응답) · 지원대상자 분류 및 전달체계 문제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신속한 정책신호 발신 및 실행 · 소비촉진 (외식주간, 대규모할인행사, 선결제, 지역화폐 플랫폼의 민간기술력 도입으로 마케팅, 주문배달, 포인트적립 등 기능) · 뉴노멀, 지역화, Untact 대응 체질개선 지원(홈코노미, 구독경제, 거리두기 지속, 방역 강화, 강제적 디지털 전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와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및 경제적 심리 위축 조기극복 · 착한 임대인+착한 소비자+착한 방역+적극행정=충남형 골목경제 시스템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농산물가격 상승의 위기 경험 · 농가소득 및 경영불안정 연결 · 자기면역력 향상 대두로 먹거리 중요성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정비 및 본격시스템 가동(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자재 확대 공급, 도내 식당에서 식자재 구매시 차액 지원 등) · 품목다양성 제고, 유통 및 소비방식 다양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품목 다양화로 균형적 먹거리 자급률 달성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보전 기여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구축
해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정상개장 불투명, 축제 불투명 · 외식중심인 수산물 소비 급감 · 해양수산 관련 충남도 대형 역점과제의 원활한 진행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내실있는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로컬푸드 확산 계기로 활용 · 가공산업 전환의 계기로 활용 · 해양수산 역점과제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해양관광 위축, 수산물 소비감소 피해를 관광상품 내실화, 로컬푸드 확산의 계기로 전환 · 가공산업화 지원으로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분야	당면과제	전략	기대효과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산업 수요 90% 감소 · 항공, 숙박여행, 회의, 유원시설업 및 중소기업체 연관사업체까지 피해 확산 · 설연휴 이후 5천여 관광객이 충남여행 취소 이후 많은 관광객 감소 · 대부분의 지역축제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협회 연계하여 피해규모 및 희망대책 파악 및 대응 · Untact, 거리두기, 면역·의료 등의 키워드를 입힌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코로나 블루 슬비람길, 금산인삼 활용 등) · 방역, 관광서비스 교육, 온라인 관광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산업 안정화 기틀 마련 · 관광객 유치 촉진의 기회 마련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교류 잠정중단, 향후 추진 불투명 · 국제공조는 비교적 원만히 추진 중 · 외국인 경계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의제 중심으로 대외교류 추진 · 제노포비아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공감대 형성 · 구체성 있는 공조방안 · 도민의 국제화 인식수준 제고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코로나19대응 연구추진단)

(중소기업·소상공인) 이민정 실장 minjoung1006@cni.re.kr
(관광) 이인배 수석연구위원 iblee@cni.re.kr
(일자리) 신동호 선임연구위원 cyberdhs@cni.re.kr
(산업정책) 김양중 연구위원 kyj0509@cni.re.kr
(농업) 강마야 연구위원 kmaya@cni.re.kr
(해양수산) 김종화 연구위원 sdart@cni.re.kr
(국제교류) 송영현 책임연구위원 pm1032@cn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3. 20), 코로나19의 관광분야 영향과 전망,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43호.

나종민(2020. 3. 31), 위기를 기회로,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다, 한국관광정책
봄호 NO. 79.

관광정책편입위원회(2020. 3. 31), 코로나19발생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와 대책, 한국관광정책
봄호 NO. 79.

충남연구원(2020. 2. 7), 충남경제 이슈보고서.

매일경제 “바운스백 코리아”연재